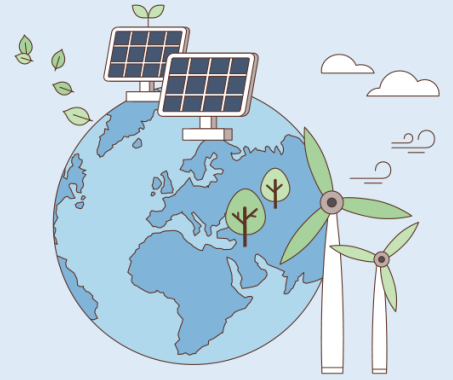


# ESG

## Weekly Focus



Economist/Asset Allocation 방인성\_02)368-6145\_isbang@eugenefn.com

### E (Environment)

#### 주간 국내 기사

- COP26 "석탄발전 단계적 감축"...韓기업도 탈석탄 서두른다 *머니투데이*
- 포드, 적극적인 ESG 움직임으로 재무 실적 개선 *한경비즈니스*
- 포스코, 1조원 투자해 친환경차 전기강판 생산공장 신설 *디지털타임스*
- 수소 조직 더 키우는 현대차·기아 *매일경제*
- '착한 광물'로 만든 배터리소재...포스코케미칼의 원료경쟁력 *한국일보*
- 한국공항, 친환경 비닐 도입으로 ESG 경영 실천 *아이뉴스24*
- GS에너지 '국내 최대 규모' 친환경 블루 암모니아 확보 *뉴스1*
- 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 생산라인 증설 투자 협약 *머니투데이*
- 국민 10명중 9명은 "탄소중립 필요"...불편감수 응답도 88% *뉴스1*

### G (Governance)

#### 주간 국내 기사

- HMM,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 적극 검토...주주 이익 극대화 *뉴스1*
- 대한통운 "2조5000억 투자 혁신기술기업 변신" *세계일보*
- SK, 美 바이오업체 투자..."세계 5위 CMO 도약 속도낸다" *아시아경제*
- 한샘 2대 주주 테톤, 추가 지분 확보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 *서울경제*
- 세대교체 나선 네이버... 한국 넘어 글로벌 빅테크 여정 시작 *파이낸셜뉴스*
- 4대그룹 연말인사 키워드는...위기 속 미래준비 위한 '혁신' *이데일리*
- SK바이오팜, 유럽 파트너사에 피소...500억원 남긴 지분매각 문제삼나 *이코노미스트*
- 한화솔루션, 美 '클린 폴리실리콘' 확보...1억6000만달러 투자 *뉴스1*
- '따상' 신화 잇는다...2022년 공모주 대어들 *한경비즈니스*

### S (Social)

#### 주간 국내 기사

- 삼성전자 인사제도 개편...'절대평가·동료평가제' 도입 추진 *연합뉴스*
- "자녀우선 채용해 달라"...'시대착오' 기아 노조 *서울경제*
- CJ대한통운, 내년 1월부터 기업고객 택배비 50~1000원 인상 *한국일보*
-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불안에 떠는 재계 "불안과 공포 상당" *머니투데이*
- 구글·애플 외부 결제 허용해도 수수료 과도하면 위법...방통위 시행령 마련 *경향신문*
- 일자리 만드는 정부라더니...청년 취업을 'OECD 37개국중 31위' *서울경제*
- 삼성 준법위 "CSR 사업의 고유 가치·의미 구현하라" *뉴스1*
- 중기부 "네이버 등 3곳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으로 공정위 고발 요청" *서울경제*
- "플랫폼 비즈니스, 통일된 국제 규범 필요하다" *뉴스1*

### 연기금 & 스튜어드십 코드

#### 주간 국내 기사

- 국민연금 "ESG 투자전략 적용 확대할 것" *이데일리*
- 거래소, 글로벌 ESG 평가기관과 MOU...국내기업 정보제공 *한국경제*
- 한국자산평가, ESG 채권ETF용 벤치마크로 '차별화' *더벨*
- 공무원연금공단, ESG 채권 발행...사회책임투자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 ESG 대세인 한데...크레딧업계 절반 "실체가 될까" *이데일리*
- 시대적 요구 ESG, 이상-현실 점점 확보 중요 *더벨*
- '핫한 ESG펀드', 1년간 1.7조 몰렸다 *머니투데이*
- 중진공 공무원연금공단-한국벤처투자, 사회적가치 실현 업무협약 *중소기업뉴스*
- "K-택스노미 등장시 ESG 투자 규모 줄어들수도" *이데일리*

주 : E, S, G, 연기금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사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됨.

## ESG FOCUS UPDATES

## 『탄소중립기본법』 의결에 따른 국내 에너지 정책 및 산업 변화

- 국회예산정책처 21.11.16

E

-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으며 같은 해 12월에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하여 발표함.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이 2000~2017년 연평균 2% 증가했으며,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고탄소 산업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이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함
- 따라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을 0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1년 9월 24일 공포됐고 2022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
- 주목할 점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중간단계 목표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돼야 한다고 명시한 점임
-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21년 8월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5.4백만톤, 18.7백만톤, 0으로 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됨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2021년 10월 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 NDC를 현행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 추진할 것을 발표함
- 2021년 10월 18일 전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했음. 확정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이 0이 되는 2개 안으로 구성됨. A안은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도로 부문의 전기, 수소차 전면 전환, 국내생산수소를 전량 그린수소로 공급하는 등 배출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안임
- B안은 화력발전 중 LNG 일부를 잔존하고 도로 부문 내연기관차의 대체 연료를 사용하며 국내 생산 수소 일부를 그레이 수소로 공급하는 대신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CCUS) 등 제거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안임
- 산업 부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탄소 대배출 업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을 위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함.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등의 핵심 감축기술에 대한 실증 및 상용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탄소중립 기술개발과 시설개선 투자가 추진되어야 함

## 국가 탄소중립 목표 추진 가속화에 따른 은행권의 대응 과제

- 한국금융연구원 21.11.13

E

-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를 명시하는 조항(제58조)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특별법 또한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예상됨
- 첫째, 국가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기후 관련 이행리스크가 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내부 리스크관리 체계를 우선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음
- 이행리스크는 저탄소, 순환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융리스크로, 1) 탄소중립 및 감축과 같은 기후변화 완화정책, 2) 기술발전, 3) 투자자나 소비자의 선호와 기대 등의 변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과정은 은행의 고탄소 배출 부문에 대한 대출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침
- 2019년말 기준 국내 은행 기업대출의 35% 정도를 차지하는 제조업 대출의 경우, 대출액 상위 10개 업종이 제조업 탄소배출량 상위 10개 업종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국내 은행들은 주기적인 시나리오 분석,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행리스크 관리 절차에 포함시키고 이행리스크 관리 체계와 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게 할 수 있는 리스크 지배구조도 마련해야 함
- 둘째, 국내 은행들은 탄소중립 목표와 이행 전략을 현재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함.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추진 가속화 및 자체적인 글로벌 탄소중립 이니셔티브 가입 등으로 인해 국내 은행들은 탄소중립 달성 또는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자체적인 목표 설정, 전략과 이행계획 수립을 현재보다 더 빠르고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
-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자금을 공급한 기업에서 배출되는 간접적인 탄소량인 Scope 3, Category 15 배출량을 포함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직간접적 탄소배출량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기간별 감축 목표, 이행계획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최근 IFRS 재단에서 국제지속가능표준위원회(ISSB)를 설립하여 기존 TCFD 체제에 기반한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발표하고, 우리나라가 이를 지지하는 36개 국가 중 하나로 참여함에 따라 조만간 국내에서도 은행들의 정보공개 양이나 수준을 일관되게 상향 표준화하는 공시 규제 강화가 예상됨
- 따라서 국내 은행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통한 탄소배출량 측정을 통해 주기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탄소중립 관련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A

### 미국의 ESG 401(k) 활성화 및 투자자문업 서비스 진출 확대

- 한국금융연구원 21.11.13

- 금년 10월 15일 미국 백악관은 기후변화를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는 일종의 시스템위험으로 간주하면서 투자공시, 보험상품, 주택대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동 보고서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정책 목표로서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금융회사의 직접적인 대응조치 의무화, 저축자금 및 퇴직연금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연방정부의 예산 수립 및 물품 조달 시 기후변화 위험 요인의 반영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이에 앞서 금년 10월 14일 미국 노동부는 ESG에 초점을 맞춘 펀드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401(k)) 편입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을 개정하는 행정지침을 발표함
- 반면 작년 10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행정지침은 401(k)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펀드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비재무성과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펀드의 401(k) 편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 자산운용사 등 월가 금융회사를 대표하는 로비단체들은 작년 10월 미국 노동부의 행정지침 발표 이후 친환경 정책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동 행정지침의 완화 내지 철회를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음
- 반면 금년 10월에 발표된 미국 노동부의 행정지침은 투자 위험 및 수익률 평가에 있어 기후변화 등 ESG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음. 또한 신의성실의무는 전기차동차 투자 확대 등 ESG 요소가 정부정책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전제될 때 제대로 준수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등 미국의 자산운용사들은 MZ세대가 ESG 경영을 선호하는 성향을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ESG 401(k) 펀드 출시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음
- 모닝스타에 따르면 작년 미국 ESG 펀드의 운용자산 대비 연간 비용은 0.61%로, 이는 개방형 뮤추얼펀드와 ETF 총계의 해당 비용인 0.41%는 물론 인덱스펀드의 해당 비용인 0.12%를 크게 상회함
- ESG 요소와 관련하여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펀드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정확한 재무실사가 전제될 필요가 있는데, 대다수 퇴직연금 공급자들의 경우 이를 위한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음
- 이와 관련하여 미국 노동부는 글래스 루이스와 등 의결권 자문회사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고함. 이러한 의결권 자문회사들은 향후 ESG 401(k)가 활성화될 경우 ESG 조사연구에 특화된 투자자문 서비스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음

E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해외 정책사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1.11.15

- 중소기업의 대EU CBAM 대상품목 수출액은 6억 1천만 달러로 대EU 수출의 1.3%(2019년 기준)수준이지만,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영향까지 고려하면 CBAM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CBAM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CBAM의 직·간접적인 영향경로를 고려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CBAM의 영향을 받게 됨
- CBAM에 대한 중소기업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평가한 결과 산업별로 취약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산업별로 차별화된 대응방안 및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산업별 취약요인에 따라 탄소감축 지원, 국내기업에 대한 피해보상, 탄소배출 측정 및 보고 역량 강화 지원 등 가장 적합한 대응전략 및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함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직접수출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은 5,806만 톤, 간접수출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은 8,333만 톤이며, 직·간접 수출을 모두 고려할 때 탄소비용 부담이 가장 큰 산업은 철강가공 산업임
- 철강가공 산업은 CBAM 대상품목이면서 간접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속한 CBAM 대응과 피해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업당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탄 및 석유 제품, 1차 금속, 화학성유 산업은 개별 기업당 탄소중립 지원규모 확대가 필요함
- 현재 CBAM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이 미비한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됨
-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범위를 탄소중립으로 인한 피해로까지 확대하는 방안, '중소기업 CBAM 자문기관' 신설,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CBAM 대응반' 구성을 고려할 수 있음
-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관련 정책 중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정책으로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업 주도 탄소중립 정책 △중소기업의 환경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수출지원사업 △저탄소화를 위한 ICT 활용 또는 디지털 전환 지원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지원 제도 및 프로젝트 확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사업 등임

## ESG 위상과 지속가능투자 발전 방향

- 대한상공회의소 21.11.15

A

- 독일 DWS 자산운용과 미국 블랙록의 전 지속가능책임자가 내부 폭로를 통해 ESG투자가 과장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금융상품의 ESG위상에 대한 논란이 확대됨
- 각국의 그린딜 및 탄소중립 대책의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바, 이러한 논란 속 각종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며 지속 가능투자(혹은 책임투자) 시장은 점차 질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함
-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지속가능투자 시장은 2018년 대비 15% 성장했으나, ESG 투자의 효시라 볼 수 있는 유럽의 시장 규모는 2018년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는 점임
- 불과 2년전 주요 5대 지역 전체 시장의 46%를 차지했던 유럽은 2020년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시장의 빠른 성장과 대비되며 시장 내 비중이 34%로 하락함. 유럽은 오히려 기정비된 제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으며, 이는 타 국가 대비 한발짝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유럽은 2018년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 2019년 그린딜 전략을 발표했고, '그린'의 기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EU Taxonomy를 정비함. 또한 기업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정보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공시 방식을 표준화할 계획을 발표하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지속가능 금융 공시제도(SFDR)를 통해 지속가능투자 전략과 투자규모 등의 공시를 의무화함
- 2021년 3월 SFDR의 1단계가 시행되며 지속가능에 대한 전략과 부정적 영향을 반영하는 방법, 지속가능투자 규모를 공시해야 하는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의 ESG 전략과 상품을 보다 객관적으로 점검했을 것임. 이에 따라 일부 펀드를 지속가능투자에서 지속가능투자가 아닌 것으로 재분류하며 지속가능투자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SFDR 1단계에서는 지속가능투자를 규정하는 세부적인 기술표준이 정비되지 않아 자율적인 점검에 따른 재분류였으나, 올해 12월 기술표준(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RTS)이 확정되어 내년 7월 이후 2단계에서 적용되면 유럽의 지속가능투자 규모는 더욱 감소한 수치로 집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러한 유럽의 움직임은 타 국가에도 확대될 전망이다. 각국의 금융당국들은 ESG 상품의 기준을 점검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ESG 공시제도 등이 정비되는 추세임
- 금융기관들이 ESG에 대한 투자 방식과 기준, 그 규모를 공시하기 시작하면 실질적인 기업에 대한 ESG 정보 요청 및 Engagement 활동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함

## ESG 와 보험회사 신용평가

- 보험연구원 21.11.15

A

- 지난해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ESG 요소가 신용평가의 상향조정 또는 하향조정 주요 요인이 된 경우 해당 신용평가기관으로 하여금 ESG 요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해당 가이드라인은 유럽연합에서 활동하는 신용평가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3월 20일부터 효력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신용평가기관들도 지난 1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된 ESG 요소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함
- ESMA는 신용평가기관의 본질적 역할은 신용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모든 신용평가에 ESG 요소 활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ESG 요소 활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을 택함
- 신용평가기관 S&P는 ESG 요소가 신용에 현저히 영향을 미치며 측정 가능한 경우에만 신용평가에 활용한다고 밝혔으며, 경제지수 제공기관 MSCI는 ESG 등급 산출 방법의 일률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함
- 보험회사 전문 신용평가기관 A.M. Best에서는 ESG 요소가 A.M. Best의 신용 평가 방법론을 구성하는 네 개의 빌딩블럭에 반영됨으로써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침
- ESMA의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A.M. Best가 수행한 신용평가의 상향조정 또는 하향조정 가운데 ESG 요소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조정의 비율은 13%로 집계되었으며 증가 추세가 나타남
- 이 중 조정 방향을 기준으로는 상향조정이 34%, 하향조정이 66%로 하향조정이 훨씬 많았으며, 보험 종목을 기준으로 손해보험 회사가 85%, 생명보험 회사가 15%로 손해보험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 보험회사의 상향조정은 지배구조 요소와 환경 요소 가운데 물리적 리스크의 영향을 받았으며, 하향조정에서는 역시 이들 영향이 가장 컸으나 그 외에 사회 요소 및 나머지 환경 요소, 복합적 요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ESG 요소별 영향을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볼 때, 금융기관 전체에서는 지배구조, 사회 요소가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보험업권은 환경 요소의 영향이 훨씬 높았고 사회 요소의 영향은 극히 낮았다는 점이 대조됨
- 신용평가에서 ESG 요소의 영향이 "있음" 또는 "매우 높음"으로 평가된 건수의 비율은 보험업권에서 4%에 그친 반면 은행업권에서는 15%, 카드사 등 기타 금융업권에서는 29%로, 보험업권이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특히 사회 요소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은행 및 카드사의 경우 대출관행, 금리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사회 요소로서 평가받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경우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 외에는 사회 요소의 평가가 많지 않음

## EU의 사회적 분류체계와 시사점

- KDB 미래전략연구소 21.11.15

S

- EU는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고자 '지속가능 금융 10대 액션플랜'을 제시('18.3월)하고, 제도적 환경 기반 구축을 위한 첫번째 단계로 EU 분류체계(EU Taxonomy)를 제안, 입법화하였음('20.7월)
- 기존 EU 분류체계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만을 정의하였기 때문에 ESG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판별 수단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UN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과 SDGs의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친사회적 목표를 위해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됨
- EU 분류체계가 '그린워싱(green washing)'을 방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분류체계는 친사회적이지 않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친사회적인 것으로 표방하는 이른바 '소셜워싱(social washing)'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EU의 사회적 분류체계는 어떠한 기업의 경제활동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인지 정의·판별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류 기준을 제시함. 사회적 경제활동의 분류기준을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으로 이원화함
- 수직적 차원은 기업의 사회적 경제활동 결과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한 상품·서비스와 경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적정한 생활 수준을 얼마나 향상시키는지 판단하는 기준이고, 수평적 차원은 기업이 사회적 경제활동 과정에서 근로자, 소비자, 지역공동체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보장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됨.
- 사회적 분류체계 판단조건으로 '상당한 기여(Substantial Contribution, SC)'와 '다른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Do No Significant Harm, DNSH)'을 제시함. 수직적 차원은 '하나 이상의 사회목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SC)', 수평적 차원은 '다른 사회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DNSH)'을 중점적으로 판단함
- EU의 지속가능금융플랫폼은 이번에 제시한 사회적 분류체계 초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EU 집행 위원회에 최종보고서 제출 예정임. 보고서 초안은 단체교섭권, 임금 등 국가별 상이한 사회규범 및 제도로 인해 분류체계의 표준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함
- 국내에서도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적격 프로젝트 선정 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노력 중임
- 정부는 사회적 채권의 투자지표 명확화를 위해 EU의 사회적 분류체계 논의 동향을 참고하여 내년중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임. 또한 사회적 가치와 연계 가능한 다양한 국제기준을 목표·실행·보고 관점에서 체계화한 '사회적 가치 지표 풀' 구축도 추진 중임

## 주요국의 위드코로나 정책비교 및 시사점

- 대한상공회의소 21.11.12

S

- 정부는 2021년 11월 초를 기점으로 국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코로나 정책을 추진 중임. 영국, 싱가포르 등의 해외 주요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함
- 영국은 접종완료율이 1%가 채 되지 않았던 2월부터 5개월에 걸쳐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계획을 수립함
-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외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위드코로나 정책과 관련한 국민과의 소통,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부족한 상황임
-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일상회복 로드맵'에 반영해야 할 세부사항을 살펴보고 단계적 일상회복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들의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영국과 호주는 위드코로나 정책의 단계 조정기준과 단계별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낮춤
- 특히, 정부에서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백신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백신패스의 사회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입시기, 범위, 발급대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상당수의 백신패스 도입국들이 사회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리나라는 위드코로나 전환을 위한 필요요건을 갖췄고, 방역체계를 전환했을 때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됨. 앞서 살펴본 주요국들은 접종완료율 50~70%대 시점에 위드코로나로 전환함. 우리나라는 현재 69.4%(10/23기준)임
- 서비스업 종사자수가 많고 자영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위드코로나 전환시의 경기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위드코로나 전환국들은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영국 82%, 이스라엘 81%, 덴마크 80%, 미국 79%, 한국 71%)
- 이들 국가들은 고강도 방역 시 경제적 피해가 크지만 일상적 경제활동으로 복귀 시 팬데믹 이후 이연된 수요(pent-up demand) 기반 경기반등의 폭 또한 큼
- 국내 GDP에서 60% 이상 차지하는 서비스업 경기 회복 시 금년 경제성장률 기준 4%보다 상향 조정이 가능함

UN SDGs 연계 ESG ETF

목표 7.

적정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URNM**

North Shore Global Uranium Mining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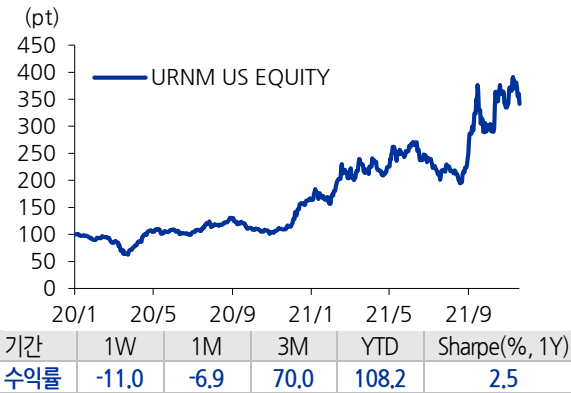
- 글로벌 우라늄 채굴, 현장 조사(exploration), 가공, 인프라 투자 또는 관련 기술 개발 기업 중 시가총액 4,000만 달러 이상 종목 대상
- 지수 내 82.5%는 우라늄 채굴, 현장 조사, 개발, 생산 기업이며, 17.5%는 우라늄 현물 보유 기관, 주체로 할당. 이러한 두 가지 분류 내에서 각각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개별 종목 비중 결정
- 개별종목 비중 상한은 15.0%, 하한은 0.30%

ETF 개요

티커	URNM US EQUITY
상장일	2019-12-04
운용사명	Exchange-Traded Concepts ETFs/
총보수율(%)	0.85
기초지수	North Shore Global Uranium Mining Index
가중 방식	Modified Cap
주당 가격(달러)	89.31
보유종목 수	41
시가총액(백만달러)	913.2
시총/전략/지역	Broad Market / Blend / Global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1월 19일 기준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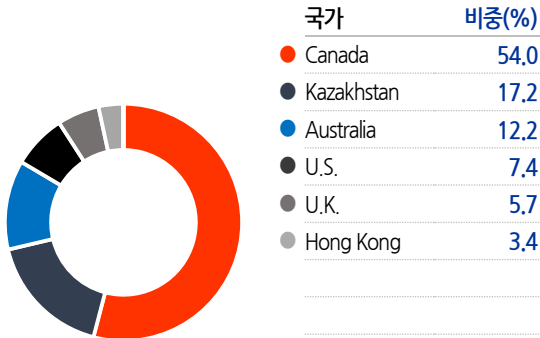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1월 19일 기준  
주: 2019.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TOP 10 보유 종목

티커	이름	시가총액 (백만달러)	비중 (%)
KAP LI	NAC Kazatomprom JSC	11,477	17.2
CCO CN	카메코	10,075	16.7
U-U CN	Sprott Phy Uranium Trust	-	7.6
EFR CN	에너지 퓨얼스	1,431	5.8
YCA LN	Yellow Cake PLC	865	5.5
DML CN	데니스 마인스	1,352	5.0
UEC US	우라늄 에너지	1,111	5.0
PDN AU	팔라딘 에너지	1,899	4.4
NXE CN	넥스젠 에너지	2,384	4.3
RUN US	Sunrun Inc	8,900	2.8
합계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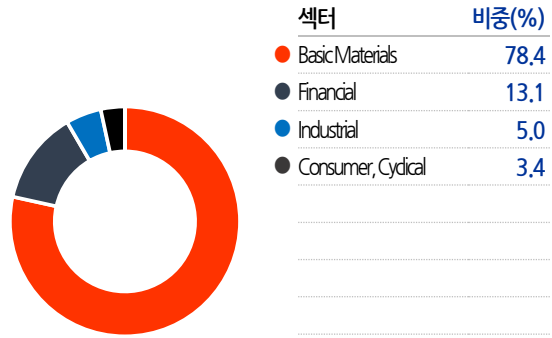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1월 19일 기준

국가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1월 19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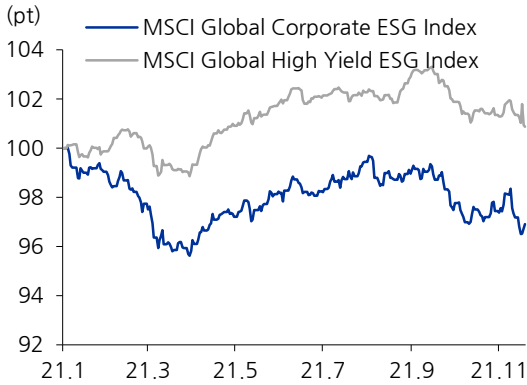
섹터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1월 19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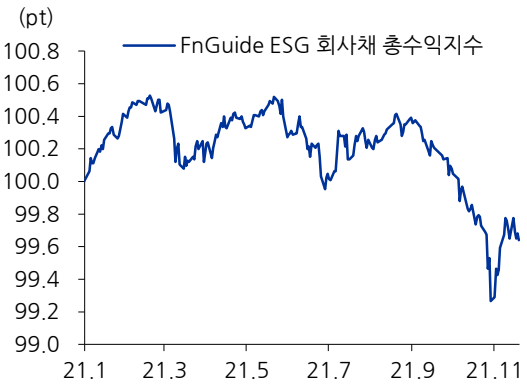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수 추이

MSCI Global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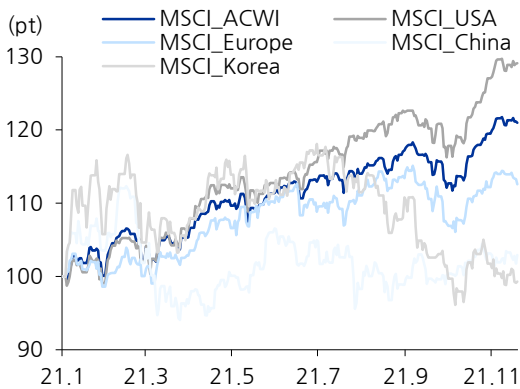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증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ESG 회사채 TR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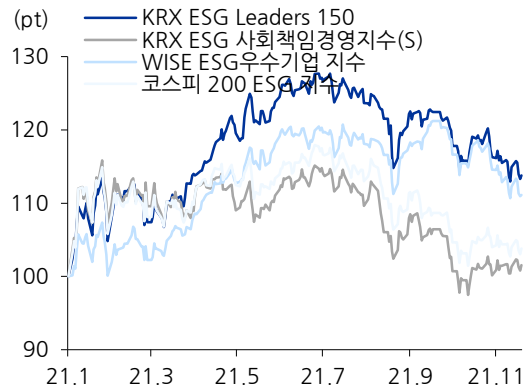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증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MSCI ESG Leaders 국가별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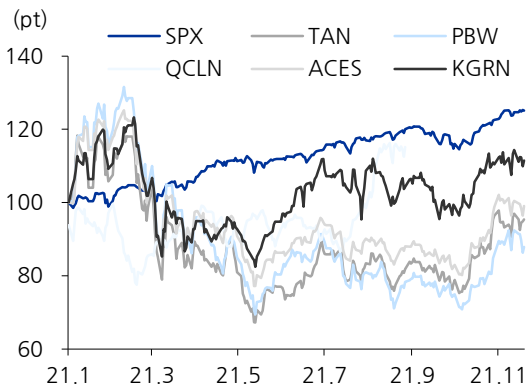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증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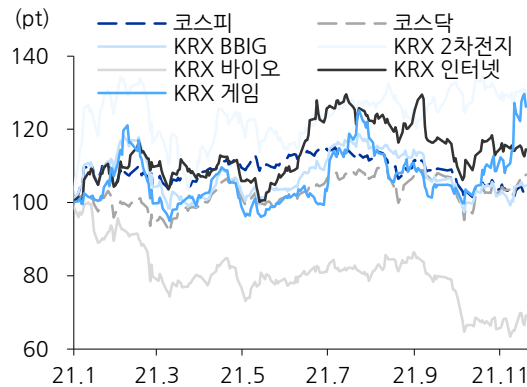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증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대체 에너지 ETF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증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K-뉴딜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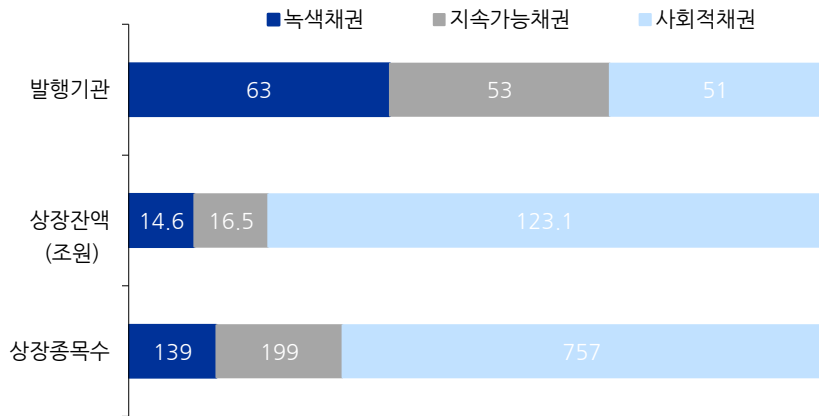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증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 신규 상장된 사회적책임투자채권

채권종류	종목명	상장일	표면이자율	상장잔액 (백만)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60(사)	2021/11/18	2.12900	160,000
사회적채권	한국자산관리공사채권제 51 회 5011-17(사)	2021/11/18	2.33600	150,000
지속가능채권	이랜드월드 97(지)	2021/11/17	5.50000	100,000
사회적채권	한국장학재단 21-15(사)	2021/11/17	2.28000	70,000
사회적채권	한국장학재단 21-16(사)	2021/11/17	1.90100	20,000

자료: SRlbond, 유진투자증권

### 사회적책임투자채권 상장현황



자료: SRlbond, 유진투자증권

주: 발행기관은 종류별로 발행한 기업의 경우 중복하여 산출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3%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7%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1.09.30 기준)